

다산포럼



김한영
지식 칼럼니스트
데일리인베스트 대기자

"전쟁은 장군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 중요하다"는 프랑스 정치가 조르주 클레망소(1841~1929)의 말처럼, "기복신앙은 신앙인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도 성립한다. 돌 다 잘못되면 불행을 낳는다. 그런데 잘된, 건강한 기복신앙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낳을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에서는 그렇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기복신앙은 '복 받기를 기원하는 신앙', 기복신앙의 복은 '살아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다. 기복신앙을 달리 표현하면 헌법도 보장하는 '행복의 추구'인 것이다. '행복의 추구'는 기복신앙의 현대적·세속화된 형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복신앙에 대한 종교계·학계·세간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우선,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신교를 전통 종교문화에 내재된 기복신앙이 왜곡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기복신앙의 부정적 측면이 분명 있겠지만, 기복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옳은 면도 있을 것이다. 무교(巫敎)가 개신교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나쁜 기복신앙, 좋은 기복신앙

도, 개신교를 비롯한 그리스도교 자체에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 사실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기복신앙이 내부에 존재한다. '그들의 기복신앙 대(對) 우리의 순수신앙'이라는 이분법적 대결구도가 실효하지만, 각 종교 내부에도 '물질적 기복신앙'과 '비물질적 기복신앙' 사이에 다름이 있다. 내부와 외부의 기복신앙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좋건 나쁘건 어떤 종교적·신앙적, 그리고 세속적 결과가 나온다. 그리스도교·불교 같은 글로벌 종교의 경전에도 기복이 빠지지 않는다. 구약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자손·재물·장수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유대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다고 믿는다. 구약의 복은 신약의 팔복(八福)으로 이어진다. 유포에는 오복(五福), 즉 수(壽)·부(富)·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이 있다. 이슬람에는 알라의 축복, 번영, 형통함을 의미하는 바라카 개념이 있다. 불교에는 삼복전(三福田), 즉 '복을 받기 위하여 공양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할 세 가지 복의 밭'이 있다. 상좌불교의 길상경(吉祥經)은 행복의 본질을 논한다. 또 불자들은 복을, 줄지 않는 무루복(無漏福)과 영원하지 못한 유루복(有漏福)으로 나누기도 한다. 무루복·유루복에 해당하는 '이유' 신약에도 나온다.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요한 4:13-14)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무루복이 다시 목마르게 하는 유루복보다 나은 것이다. 부귀영화·무병장수가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신앙인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열반이나 구원일 것이다. 기복에도 우열이 있다. 또한 기복에는 단계가 있고, 기복을 얻는 수단 차이가 있다. 기복신앙으로 출발해 순수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있다. 못자리나 부척, 굿으로 복을 꾀할 수도 있고 선행을 통해 복을 기대하기도 한다. 기복신앙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종교의 종파나 신학은 기복신앙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예수가 한 이 말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뜻이 다르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마태오의 복음서 21:20) 여기서 '무엇이든지'에는 무병장수나 부귀영화도 포함되는 것일까 아니면 배제되는 것일까. '무엇이든지'를 주로 재물로 이해하는 신앙인들은 번영신학(prosperity theology)의 성격이 강한 교단에 속하게 된다. 그들은 재물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몹시 답답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학점이 높게 나오는 게, 높은 학점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좋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복을 받는 게,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학점과 복을 추구하는 게 순 놓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꿈꾸는 2040



김병수
위인연구원 이사
광산구청 인권팀장

최근 야당의 대표의 차별금지법 처리와 관련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차별금지법 처리는 사회적 대화나 타협이 시급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민생이 분리될 수 있느냐는 비판과 함께 일부 종교계의 성소수자 보호에 대한 반대로 전체 차별금지법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이용과 공급, 행정서비스 제공과 이용 등 4개 영역에서 성별과 장애인, 인종, 학력, 성적지향,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종교계에서 반대하는 성적지향 즉 성소수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두고 차별금지법 전체를 반대하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국내에는 장애나 성별, 연령, 특정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런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기에, 개별법을 떠나 모든 차별에 관한 종합적 법률이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다. 차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노동 불안정, 소득 감소, 돌봄 공백, 고립과 우울, 혐오와 차별 등으로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고통을 겪었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인권적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대응이 일부 계층에 집중된 피해를 유발했다는 조사 보고서도 존재한다. 소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혐오는 코로나 이후,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초 챗봇 '이루다'의 차별과 혐오 표현 사건은 인공지능이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그대로 학습해 재생산하는 것에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인공지능조차도 쉽게 학습할 정도의 차별과 혐오 표현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한 온라인 혐오 표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오프라인 실생활이나 온라인 두 곳 중 한 곳에서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을 보거나 혐오 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70.3%로 조사됐다. 혐오 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2010년경 이후이다. 특히 비대면인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 표현은 정치영역과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 차별과 혐오 표현이 지역주의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었다면 현재는 더 광범위하게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혐오 표현은 지속적,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특정 집단인 표적 집단을 향하는 것으로 그 구성원에 대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공포와 위축, 좌절감 등 표적 집단 구성원에 관한 왜곡된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인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에 대응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됐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평등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은 2013년까지 7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안심의회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2021년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성립 요건인 국민 10만 명 동의를 얻었지만 청원 심사 기간이 연장됐고 이후 개별 의원들에 의해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럽연합은 연합 가입 조건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유럽연합 여러 결의안과 국제법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돼 대부분의 회원국은 강도 높은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유엔 역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꾸준히 요구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의 인권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필자는 서두에 밝히듯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의 차별 해소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물론 성소수자의 인권 역시 우리 주변에 실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더 근본적인 것은 차별금지법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한국 사회의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의 핵심 원리로 다루고 있지만 평등의 원칙을 더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법률로 제도화해야만 한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다양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 교과서와 5·18 민주화운동

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그 중요성을 경시하려는 노력에 부딪혔다. 오늘날 그 역사적 중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학교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가르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진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이 민주화운동은 군사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운 광주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을 상징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수많은 후속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5·18 민주화운동은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전국적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후세대에게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독재와 억압에 맞서는 정신을 계승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을 전국적으로, 나아가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보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한 투쟁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 군사독재와 억압에 맞서 싸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배우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민주화운동에도 영감을 줄 수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확산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 세계 인권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국화 및 세계

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지금까지 주로 이뤄졌던 국내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로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 전국화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 교과서를 발간하고, 교사들을 광주로 초청해 현장 연수를 진행하며, 5·18 민주화운동 수업 꾸러미를 전국 어느 지역이든 신청하면 제공한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을 광주에 초대하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세계에 나가 홍보하기도 했다. 올해 8월 대만 타이난 고등학교가 광주에 와서 5·18 세계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광주 학생들도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으로 세계에 나가 5·18를 알렸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 시민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 시민의 희생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려는 소수의 개인 또는 단체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거나 논란을 일으켰다. 그때마다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싸워줬고 이겨냈다. 이번 교과서 논란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지켜낸 것도 이 같은 다양한 노력의 결과였다.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 학계, 광주시교육청, 광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社說

의사 부족해도 의대 교육과정 단축은 안돼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에 대해 내년 복학을 조건으로 휴학을 허용하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교육부장관은 그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내년 1학기 수업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밝혔다. 여기에 의료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사실상 의대생들의 휴학계승인 금지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의대 교육의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의대 2학기 등록률이 3.4%에 그치는 등 올 1년간의 교육 공백을 인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내년 복귀를 못 박으면서 의대생들에게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읽힌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의대생에게 편법 휴학을 강요하고 대학 학사

행정의 자율성을 무너뜨렸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내년 의사 배출 증단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라지만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부실한 교육을 받은 자역 미달의 의사를 양산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역병이 적을 경우 5주간인 기초군사훈련기간도 4주 이하로 줄여 군인을 배출하지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대학의 건축학과는 4년제에서 이미 수년 전에 5년제나 6년제로 바뀌었으며, 이를 승인 등록률이 3.4%에 그치는 등 올 1년간의 교육 공백을 인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교육부가 의대생들에게 내년 복귀를 못 박으면서 의대생들에게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읽힌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의대생에게 편법 휴학을 강요하고 대학 학사

고질적인 전남 해양 쓰레기 근본 대책 절실

전남 해안의 오염원으로 꼽히는 해양쓰레기가 타지역의 두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2019~2023년 해양쓰레기 수거량'에 따르면 지난해 수거된 해양쓰레기(13만 1930t) 가운데 전남 해안에서 거둬들인 쓰레기가 4만 2475t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충남이나 경남의 2~3배를 웃도는 양이다. 최근 5년 간 전남지역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18만 3710t)도 제주 7만 7586t, 충남 6만 7248t, 경남 5만 9603t, 경북 4만 1187t, 강원 3만 8576t 등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전국 해안선의 44.9%에 달하는 바다를 끼고 있는 전남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양 쓰레기가 국내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5년 간 해양쓰레기 발생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44만

8235개 중 98.2%인 44만 32개는 국내에서 유출됐다. 어민이 방치한 폐어구는 물론 군민이 배출한 각종 생활쓰레기가 청정바다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해양쓰레기는 전남 어민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다. 전남지역 수산물 생산액(2023년 3조 1127억원)은 전국(8조 1898억원)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하지만, 해양 오염으로 자원이 고갈되면 어민이 생계의 토전을 잃게 된다. 청정 바다 이미지도 타격을 줬 결국 전남 산 수산물이 외면받게 될 것이다. 전남도가 해마다 해양쓰레기 정화·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해양쓰레기 문제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만큼 정부와 해양 당국은 해양쓰레기 방지대책, 수거·활용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無等鼓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 빼놓을 수 없는 권한이 국정감사다.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국회의원 활동의 꽃으로도 불린다. 매년 '맹장 국감', '정쟁 국감' 등의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국감은 지난 1988년 민주화를 통해 회복한 엄연한 국회의 핵심 권한이다. 국감은 제한헌법에 근거를 두고 1949년부터 꾸준히 시행되다가 박정희 정권 때 사라졌다.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좋아할 리 없었던 정권은 1972년 유신헌법을 통해 국정감사를 폐지했다. 유신 체제가 끝나고 5공화국이 들어선 뒤에도 국감은 재개되지 못했다. 국감의 부활은 87년 6월 항쟁의 성과였다. 민주화의 열망으로 이뤄진 9차 개헌을 통해 국감은 1988년 부활했다. 이후 이뤄진 첫 국정감사는 제 5공화국 시절 비리와 불법이 낱밥이 파헤쳐지면서 국민들이 국회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장으로 역할을 했다. 국감 부활 30년이 넘는 지금은 어떤가. /김지를 정치부 부장 dok2000@

국정감사

피감기관과 여당 의원들이 함께 자리를 하는 것부터 적절하지 않다. 공천 개입 의혹, 도이해 국정감사를 삭제했다. 유신 체제가 끝나고 5공화국이 들어선 뒤에도 국감은 재개되지 못했다. 국감의 부활은 87년 6월 항쟁의 성과였다. 민주화의 열망으로 이뤄진 9차 개헌을 통해 국감은 1988년 부활했다. 이후 이뤄진 첫 국정감사는 제 5공화국 시절 비리와 불법이 낱밥이 파헤쳐지면서 국민들이 국회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장으로 역할을 했다. 국감 부활 30년이 넘는 지금은 어떤가. /김지를 정치부 부장 dok2000@

기고



김경훈
광주교육시민멤버서더

2025년부터 사용하기로 예정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최근 평가가 중요한 공론화를 불러일으켰다. 논란의 핵심은 일부 교과서에서 관련자들을 '반군'으로 표현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은 교과서에 5·18 민주화운동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자체 검토했다. 지역 고등학교 역사 교사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의 철저한 검토 결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7종과 고등학교 한국사 9종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 왜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역사적 사건의 묘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지만,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역사적 왜곡이 없다는 것이 이번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추적인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이 늘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수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이 중추적인 사건은 그 의미를 왜곡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충태 | 편집인 최재홍 | 논설실장 윤영호 | 편집국장 최재홍 | 제작국장 김진욱
1952년 4월 20일 창간 |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 팩스번호 222-8111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채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